

# 미 수은 동향 보고

## - 미 하원, 미 수은 7년 재인가 전격 합의

(2019. 6. 27.)

워싱턴사무소

### 1 재인가 관련 현황

- (금년 9월말 이전 재인가 승인 필요) 미 수은의 지속적인 존속을 위해서는 의회의 미 수은에 대한 조속한 재인가 (reauthorization) 필요
  - 미 수은의 현 인가(authorization)는 2019. 9월말 종료 예정으로 미 수은의 영업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현 인가 만료전 재인가 필요
    - 미 수은에 대한 재인가 기간은 통상 4년이었으며, 현 인가도 2015년 미 의회로부터 2019. 9월까지 4년 인가를 받은 것임
- (트럼프 정부, 미 수은 지지) 백악관 주요 고위 관리들은 미 수은의 필요성 역설 및 의회 앞 미 수은 재인가 촉구
  - Lawrence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(특히 중국)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 수은이 필요함을 역설하고, 미 수은을 금융수단이자 국가안보무기로 언급
  - Peter Navarro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미 수출기업의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미 수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의회 앞 현 인가 종료 전 재인가를 촉구

## 2

## 미 하원, 재인가 합의

□ (재인가 전격 합의)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\* Maxine Waters 의장(민주당)-Patrick McHenry 위원 (공화당) 간 미 수은 재인가 전격 합의 (2019. 6. 18.)

\* the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

□ (주요 합의내용) 미 수은 재인가 기간을 7년으로 하고, 여신한도를 확대하되, 금융 지원관련 제한사항 신설 등

○ (재인가 기간) 통상 4년인 재인가 기간을 7년으로 하여 비교적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 확보

○ (여신한도 확대) 미 수은의 여신한도(Statutory Limit on Lending)를 1,350억 달러에서 1,750억 달러로 점진적 확대

○ (금융지원 제한사항) 중국 국영기업 참여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지하고, 중소기업, 소수민족 소유기업 및 미국령 (푸에르토리코 등)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

- 미 수은에 대한 금융지원 제한사항 신설은 미 수은 재인가에 반대해 온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조치임

-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미 수은의 금융지원을 “기업복지”(corporate welfare)로 간주, 민간섹터가 지원해야 할 분야에 미 수은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고 비판

- (기타사항) 임시 이사회 구성을 통한 미 수은의 영업 연속성 확보 방안 마련, 미 수은 명칭 변경 등 포함
  - 상원의 미 수은 이사회 멤버 지명자에 대한 인준 지연에 따른 이사회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반복적인 영업중단 사태\* 방지 방안\*\* 마련
    - \* 2015. 7월부터 4년 간 지속된 이사회 정족수 부족으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장기/대형 사업승인 지연
    - \*\* 미 상원이 이사회 멤버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장기간 거부하는 경우 미 수은 경영진으로 임시 이사회 구성 가능
  - 미 수은 명칭을 United States Export Finance Agency로 변경
  - 항공기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거래에 대한 금융지원 제한 등

### 3

### 향후 전망

- (최종 승인까지는 가시밭길 전망) 최종 재인가 승인까지는 상하원 모두에서, 특히 상원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
  - Maxine Waters 의장 및 Patrick McHenry 의원은 수주내 재인가 합의 법안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통과를 목표
  - 보잉이 소재한 워싱턴 주 하원의원 Denny Heck을 비롯해 미 수은을 지지하는 민주당 내 일부 하원의원들은 미 수은에 대한 금융지원 제한을 포함한 금번 합의 법안에 반대의사 표명
  -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가진 하원에서는 비교적 무난히 합의 법안 통과가 예상되나, 공화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상당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

- (재인가 승인 전망 우세) 미 의회에서의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, 결국에는 미 수은에 대한 재인가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
- 트럼프 정부 고위 관리 및 미 수은 지지자들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 등과 세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미 수은의 금융지원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역설
- 재인가 기간이 7년으로 비교적 장기적인 영업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고, 최근 미 수은 은행장을 비롯한 이사회 멤버 3명을 미 상원에서 인준\*하여 4년 만에 미 수은의 영업정상화가 이루어진 상황도 재인가 승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
  - \* 미 상원, Kimberly Reed 은행장, Spencer T. Bachus III 이사, Judith DelZoppo Pryor 이사에 대한 인준 완료 (2019. 5. 8.)
- 특히 합의 법안은 미 수은의 금융지원 제한사항 및 중소기업\*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금융지원 다변화로 미 수은에 반대해 온 공화당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
  - \* 현재 미 수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지원 비율은 연간 전체 승인액의 25% 이상
- 재계에서도 현 인가 종료전 재인가 승인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제한 조항 등을 용인할 것으로 전망
  - 전미제조업협회(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)는 합의 법안에 대한 찬성입장 표명 (2019. 6. 21.)